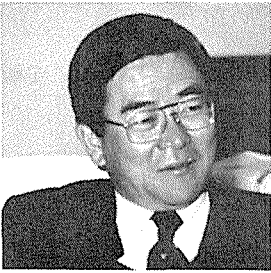


# 개방화시대의 에너지정책방향



李 鳳 瑞  
〈동력자원부장관〉

이 글은 지난 5월 20일 파레스호텔에서 열린 에너지경영인 간담회에서 李鳳瑞 動資部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註〉

**오늘** 에너지협의회가 총회 성격의 조찬회를 가지면서 저에게 첫 초빙강사로서의 영광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방화시대의 에너지정책의 방향」이라는 토픽은 매우 시사성이 있으면서도 그 내용을 엄격히 생각해 보고 분석해보면,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닌 것이며,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것입니다.

요즈음 開放化시대라는 것이 여러가지로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우선 開放의 개념부터 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관해 저는 지금 두가지가 섞여져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정부의 간섭으로부터의 개방, 즉 민간주도형을 의미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Closed Economy에서 Open Economy로 나가는 것, 즉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세계시장으로 나간다는 개념의 개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개방정책이다, 경제가 개방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 두가지가 섞여서 쓰여지고 있으며, 말하는 사람의 그 당시의 관점에 따라 어떤 때는 민간주도형이 더 강조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Open Economy가 더 강조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즈음 왜 갑자기 개방개념이 시사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나 하는 것을 묻게 됩니다. 국내적으로도 몇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나라 경제가 그동안 크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해방되어도 자율적으로 커 갈수 있는 민간주도형 주체가 생겨났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경제의 성장에 따라 얼마전까지만 해도 겪어왔던 赤字경제로부터 이제 黑字경제로 전환된 것도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하나는 경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만, 요즈음의 정치개방 분위기가 분명히 경제개방을 좀더 크게 그리고 시의에 부합되게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국내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국제적으로도 현재 개방이라는 것이 상당한 인기상품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레이건이 지금 美國대통령을 8년째하고 있습니다만, 소위 Reaganomics라는 Terminology가 경제학자마다 그 해석이 다르고 이해하는 내용이 다름니다마는, 그 골자를 몇가지 요약해 본다면 적은 정부, Free Competition, Free Individual Economy등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이 개방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鄧小平이 中共을 개방화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정치의 개방이 있고, 경제의 개방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개방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또한 정치와 경제의 개방이 섞여서 이야기가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개방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국내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히 인기를 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즈음 개방주의, 개방경제, 개방정책이라는 것은 자칫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지 않나하는 것도 현실이라고 봅니다.

개방주의 또는 민간주도형은, 「Free Economy는 좋은 것이며, 경제이론적으로도 그러하며, 좋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도 계속 그러해온 것이며, 또한 그럴수 밖에 없다」는 정도에까지 지금 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숙고해 보면 정치가 그렇듯이 경제에도 유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같이 개방주의 또는 민간주도형 경제이론이 과거에 성시를 이룬때가 그렇게 흔치 않았다고 보며, 조금 더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경제는 개방되어야만 된다. 민간주도형은 반드시 좋은 것이다」하는 이야기만을 해오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사적으로 본 開放의 역사는 역시 경제이론의 선조라고 불리우는 아담 스미스의 「國富論」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國富論」에서 민간주도형의 경제이론을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할 때, 자유경쟁체제를 간섭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둔다면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서 모든 것은 자연적으로 가장 Optimum한 Solution으로 갈 것이라는 요지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18세기 중엽에 책으로 발간되어 그 후 크게 각광을 받게 되었으며, 특히 이것이 英國에서 산업혁명과 아울러 英國경제의 지속적인 번영을 초래케 하였으므로, 그만큼 더 Popularity를 가질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英國과 달리 산업혁명에서 한발 뒤떨어진 獨逸은 반드시 아담스미스의 이론이 옳다고는 하지 않은 쪽이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리스트 같은 사람은 개방주의 이론이 英國에서 상당히 유행되고 있을때 獨逸같은 경제에서는 오히려 어느 정도의 Protectionism, 즉 보호주의가 경제체제에 부합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하튼 아담스미스의 이론은 1920년까지 품미했으며, 이것이 결정적으로 시험을 받게 된 것은 1930년대의 세계적인 공황때 입니다. 세계적인 공황하에서 경제라는 것이 invisible hand에 의해서 스스로 해결되는 능력을 반드시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된 것입니다.

1930년대에 케인즈가 소위 케인즈 이론을 주창했으며, 사람들이 이를 일컬어 「케인즈혁명」(Keynesian Revolution)이라 하고 있으며, 이의 골자를 개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경제를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스스로 해결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적절한 Intervention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이후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共產圈을 중심으로 또는 자유진영에서 경제개발 정책을 세웠을 때, 우리는 두가지 이론의 Talent가 병행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그 나름대로 통제경제원칙을 선택했고, 민주주의 진영은 자유개방주의 경제원칙을 선택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진영만 하더라도 저개발국가의 경제개발에는 반드시 자유주의, 소위 아담스미스의 이론이 그대로 채택되지는 않았읍니다. 이른바 계획경제의 이론, 이것이 오히려 경제개발의 촉진에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크게 대두되었으며, 사실상 印度와 같은 나라를 중심으로 1차 5개년계획, 2차 5개년계획 등을 수립했던 것을 우리가 그 모델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그 당시의 경향에 따라 1, 2차 5개년계획을 수립했고, 제6차 계획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도 그 당시 분위기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 2차와 같이 경제계획 자체가 Bible로서 준수되어야 한다고 하던 그 당시의 분위기와 지금의 경제계획이 의미하는 것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이 경제계획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美國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Reaganomics를 중심으로 한 Free Economy가 제일이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은 최근의 분위기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1950년대는 말할 것도 없고 60년대만 하더라도 美國에도 하버드대학을 중심으로 한 소위 Keynesian 학파와 시카고大學을 중심으로 한 시카고학파가 있었는데, 여러가지 차이점중 가장 큰 것은 하버드를 중심으로 한 Keynesian 학파는 필요할 때에 정부의 간섭은 어느 정도 정당화가 된다고 하는 것에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인 행정의 시책에서 그러한 개념의 차이가 나타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분께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Test를 받은 것

은, Bay of Pigs라는 여러가지 군사적인 테스트도 있지만, 경제면에서 제일 큰 테스트는 제강업체인 철강산업이 정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거의 단합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철강산업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만일 자유경제주의를 경제정책으로 반영했다면 제강업계가 그들의 필요에 의해 인상한 가격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므로 그대로 두었어야 할 것입니다만, 그 당시 케네디 행정부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생각으로는 인상 이유가 없는 가격인상을 했다고 하여 그 인하를 종용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인상이 강행되었을 때 케네디정부는 여러가지 행정적인 압력수단을 동원하여 결국은 가격을 다시 인하시킨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본주의의 宗主國이라고 하는 美國에서도 60년대까지는 분명히 자유경제와 통제경제의 이론과 실재가 병존해 있었던 것입니다. 70년대를 지나 80년대에 접어들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레이건 대통령은 최소한 지금 행정원칙으로 개방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레이건의 이러한 경제원칙이 그 나름대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비록 정부 예산과 무역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큰 적자를 시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성장, 고용등에서 그 어느때보다 가장 큰 번영을 누리고 또한 boom의 기간이 제일 긴 성공적인 경제 Performance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것으로 인해 자유경제에는 좋은점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인기를 누리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소련이나 中共과 같은 통제경제의 나라들이 과거의 실패를 자인하고 자유경제로 돌아오는 그러한 분위기 자체도 자유경제이론의 가치를 크게 신장시키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역사와 최근의 분위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방주의 경제이론이 역사적인 추이로 보나 세계적인 추이로 보나 현재 가장 촛점이 되고 있는 이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방 자본주의 국가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항상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옳은 이론이었다고 했던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70년대 英國의 경제가 어려웠고, 獨逸의 경제가 상당히 번성했을때 아담 스미스를 배출한 英國은 오히려 Protectionism의 가치성을 이야기했고, 프리드리히 리스트를 배출한 獨逸은 아담 스미스의 자유경제이론이 옳다고 했던 것만을 보더라도 이 이론은 역시 그때 그때의 자기 필요성에 따라 적용, 주장 그리고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단정적으로는 이야기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개방주의 또는 민간주도형 경제체제는 경제기반이 풍요하고 상대적으론 경제싸움에서 그리고 경제체제에서 우위에 있는 입장에서 편리한 경제이론이고 또한 상당히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유경제체제의 성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에너지政策을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즉 그동안의 에너지정책이 어떻게 되어 왔으며, 요즘 유행되고 있는 개방주의 분위기에

서 앞으로의 에너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어느 분야 보다도 정부의 간섭이 많은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에 대해서 반박할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을 비판하는데 있어 개방자체를 척도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에너지정책의 기본 목표가 개방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너지정책의 기본목표를 제 나름대로 정리하면 크게 두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에너지수급의 안정에 있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가격의 안정에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두가지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좋느냐에 대해서는 더러는 개방정책이, 더러는 통제정책이 좋을 것이다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이 비록 완전한 개방주의 원칙을 근거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까지의 결과에 있어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이 아닌가하고 평가해 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동안 1, 2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도 지난 15여년간 거의 年10%의 실질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질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데 에너지는 큰 몫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단이 어떠한간에 그 만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었던 정책수단이었다면 과히 크게 나무람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방」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칫 우리가 혼동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Government Control과 Government Red Tape가 서로 혼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소위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 민간 주도로 가야 된다하는 이야기를 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부의 Red Tape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행정의 간소화로써 해결될 문제인 것이지 정책의 방향전환으로써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정부는 계속해서 에너지분야를 간섭해야 되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이 국내외의 추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과거와 같은 그러한 기본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대가 변해갑니다. 그리고 여건이 변해갑니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우리는 현재까지의 수단이 비록 그것이 수단일 망정, 그것이 가장 좋은 代案이었는데에 대해 한번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변화된 상황에서 과거의 정책수단이 상대적으로 덜 효과적이며 앞으로 개방정책을 채택하여 수단을 동원했을때 좀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긴다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데는 서슴치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현재까지 우리정부가 에너지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수단을 동원했느냐 하는 것을 크게 몇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 또는 기본 목표는 수급 및 가격의 안정에 있습니다. 이 수급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동원한 수단을 물을때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업의 허가

를 통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Free Entry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일단 에너지 산업체에 들어온 분은 다른 경쟁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업계마다 다소 다릅니다. 우리 석탄업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보호측면에서의 Free Entry의 간섭은 거의 하지 않고 신고제로서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석유업계, 가스업계 및 상당한 다른 업계에는 Free Entry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적정시설의 투자를 유도하고 그 투자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업주마다 판매구역의 통제를 하는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마다 다릅니다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탄의 경우로, 현재 판매구역이 설정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한 구역에 세업체, 두업체, 심한 경우에는 한 업체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기본적인 이유를 보면, 공급이 부족할때 그 업체로 하여금 그 구역을 책임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며, 특정업체의 독점적인 이익을 보장키 위한 것이 아니므로, 시장의 구역판매권을 설정하는 것도 결국 수급안정을 기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의 정책수단으로 우리가 동원하는 것은 수출입의 허가를 통해서 외국상품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석유업계이며, 이는 소위 소비지정제주의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가지 수단, 즉 Free Entry를 통제하고, 어느 정도의 Market Zone을 인정해주며, 그리고 수출입을 통제하는 것으로서 수급안정의 목표를 기하는 것 이외에, 가격 안정을 위해서 동원하는 수단을 말씀드리면, 우선 최고가격제를 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석유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세후 10%선의 이윤을 더러는 보장해준다고 하고 더러는 더이상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서로 보는 견지에 따라서 의견이 다릅니다마는, 그렇게 계산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석탄의 경우에는 石公의 Break-even Point 수준에서 전체가격의 실링으로 정하여 운영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급과 수요의 기본적인 그 당시의 분위기와는 달리 통제가격을 정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그 가격 이상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또 가격에는 다른 한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수한 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해 어떤 특수한 제품의 가격을 일부러 저렴한 수준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전기의 경우 농사용의 전기요금에 일반산업용보다 50%나 저렴한 것은 농민들을 돕는다는 정책의지의 표명이라고 봅니다. 또 석유제품의 경우, 輕油를 유난히 저렴하게 하는 것은 輕油가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연료이기 때문인 것으로, 대중교통수단의 가격 압력을 가능한 줄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개방을 해야 되는 분위기 그리고 개방

을 할 수 있는 경제여건에서, 어떻게 변경되어야 하겠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일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이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원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가격체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여기에는 불필요한 보조가 있어도 아니될 것이며, 원가를 떠나 너무 싸게 또는 너무 비싸게 책정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원가와 괴리되어 산정되는 상황하에서는 국내 업체간의 자유스러운 경쟁이 있을 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경쟁속에서는 소위 Free Entry를 없애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우리의 입장에 맞춘 가격구조를 유지하다 보면 국제가격 패턴과도 전혀 같지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출입을 허가하려 해도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괴리가 심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출입의 통제를 풀기조차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석유제품의 경우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아무도 수입을 하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제품은 누구나 다 수입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石油와 같은 連產品의 경우에 한제품이 지나치게 수입이 되지 않거나 또는 지나치게 수입이 된다고 하면, 그 제품만의 Market Destruction 문제가 아니라 정유업계 제품 전체를 뒤 흔들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수입을 개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출입을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가격체제를 최소한 상대적인 가격구조에 있어서 국제교역이 가능한 양상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수출입을 자율화하기 위해 내일 당장 가격체제를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농사용의 전기요금이 한꺼번에 두배가 될 것이고, 輕油값이 일시에 대폭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버스요금의 인상을 유도하고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유발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구조의 개선을 이룩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에 걸쳐 단계를 밟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의 인하조정시 과거에는 농사용 전기요금을 비록 그것이 원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의 입장과 정치적인 반응을 고려하여 계속 같은 비율로 인하시켰습니다만, 지난번 조정시에는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하를 거치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할 때 제너럴대로 상당히 망설였습니다만, 동자부를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많은 이해를 해주셨고, 그리고 관련되는 부서에서도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시행에 큰 비판을 받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가격정책을 油價와 전기요금에도 계속 준용함으로써 시간을 두고나마 에너지가격체제를 바로 잡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시행해온 가격정책과 관련해서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석유가격에 관한 것입니다. 석유가격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에너지가격의 근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국제유가들이 변동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한 국내油價를 안정체제로 유지해 나가려는 생각으로 정책을

펴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油價를 책정하는데 있어 原油價 자체가 實導入價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현재 실토입가가 15달러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18달러로 책정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관세 10%와 석유사업기금이 포함되어 종합적인 Package의 가격으로 국내유가가 설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油價가 상당히 인상되더라도 국내油價의 안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즉 국제유가가 18달러까지 인상될 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19달러까지 올라가면 관세 10%로 감당이 가능하고, 그리고 21달러까지 올라가더라도 그 동안의 기금을 가지고 약 2년정도는 버틸수 있는 안정 valve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최근 원貨의 切上이 계속되는 여건하에서 석유사업기금이 예기치 않게 지나치게 모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최근의 숫자를 보더라도 배럴당 거의 8달러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2달러 수준 또는 그 이하에 비해 너무나 높은 숫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다시말해 국제原油價가 향후 현재의 수준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그리고 원貨의 절상이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이면, 이러한 석유사업기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석유사업기금의 규모를 축소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가능한한 국내油價를 국제油價와 상대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수준에까지 접근케 한다는 의미에서 油價인하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장래에 관세부처간 합의가 된다면 국내의 油價인하는 단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貨의 절상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Pace로 움직인다면 환율과 연동하는 油價체제를 마련하여, 환율의 절상폭을 보면 油價인하의 폭을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판매구역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판매구역 제한은 연탄분야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저는 역시 판매구역의 독점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판매구역은 과거 연탄의 공급에 기본적으로 위협을 느꼈을때 공급책임을 부여한다는 뜻에서 구역제한이 설정되었읍니다. 이제 그러한 공급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우리가 해방된 상황에서 계속하여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며, 오히려 이제는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탄시장 구역도 최소한 단일구역은 가까운 장래에 가능한한 광역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품의 수출입 자유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가격이 어느정도 수출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그때는 원칙적으로 수출입이 자율화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격만 맞으면, 즉 가격만 외국과 패턴이 비슷하면, 상대적인 패턴입니다만, 수출입이 완전히 개방되어도 되느냐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단서를 붙이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수출입을 우리가 텃을때 수입제품이 국내제품보다 결정적으로 저렴하여 국내에너지업계에 존폐의 위협이 된다는 상황하에서도 수출입의 자율화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질



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에너지政策의 기본목표의 첫째가 수급의 안정이라고 보고 수급의 안정은 어느정도 국내의 공급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수입을 터서 비록 어떤 시점에서 좀더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에너지업계의 도산을 초래하고 이로인해 우리나라 에너지공급기반을 완전히 교란시킨다면, 이러한 정책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우려성이 있다 하면 그때는 수출입은 하되 어느정도 제한된 것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제한된 수출입인 것입니다.

한편 가격 경쟁력이 없다고 하여 항상 100% 보호하는 정책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너무 공급하는 측면만 보호하다보면, 수요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야 된다는 목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이 대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 보호를 받고 있는 산업은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비싸서 1대 1의 경쟁에서 국내 업체가 불리한 여건에서라도 어느 정도의 개방을 통하여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100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 수입과 국내 공급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정책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상당한 부분, 예를 들어 20-30% 정도는 개방해서, 우리 상품보다 유리한 것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러한 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지켜왔던 소비지정제주의의 기본원칙에 다소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여겨집니다. 또한 100이라는 것이 국내에 필요할 때 100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가져야 되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 valve까지 생각하여 130이라는 시설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출입의 자율화와 이것을 정책수단으로 동원하기까지는 우리의 가격 패턴 부터가 정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내일중 당장 전반적으로 적용될 그러한 정책수단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수출입을 자율화한다고 할때 국내업계의 Free Entry가 자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저는 반드시 같이 가야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외국물건이 들어 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국내업계의 자유경쟁을 왜 막느냐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당시의 여건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여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입을 트는 순간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인정하라는 그 분야의 제품이 국제가격과 비교해서 싸냐 비싸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Criteria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국제가격보다 저렴한 제품에 대해 수출입을 트면서 Free Entry를 인정하라고 하면 거기

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국제가격보다 저렴한 물건이라면 기본적으로 수입이 많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내가격이 저렴한데 무엇때문에 수입이 되겠습니까? 그때는 형식적인 수입이 될 것이며, 앞으로 국내 제품가격이 상승한다면 수입제품이 들어온다는 Warning을 하는 역할은 될 망정, 당장 물건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완전한 개방이 가능하지 않은 수출입 여건하에서 새로운 업체의 Free Entry를 인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에 대해, 저는 오히려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격이 비싸다고 한다면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기존 업체보다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국제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자신이 있으면 몰라도, 그것이 그것이다할 때, 새로운 업체의 인정은 별 뜻이 없지 않느냐, 오히려 싼 물건을 수입해서 공급하는 것이 더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업체를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시켜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 그리고 1대 1로 국제경쟁력이 생겼을 때, 수출입의 완전한 자율화와 국내업체의 완전한 Free Entry를 인정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개방시대를 맞이해서 에너지정책수단이 어떻게 동원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제 나름대로 골자만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면, 들으신 분에 따라서는 겨우 그것뿐이냐라고 생각하실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에 따라서는 자칫하다가는 상당히 변화시킨다는 이야기가 아니냐하는 생각을 하실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에너지産業은 경제를 끌고 나가는 기간산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간산업에 있어 수급 및 가격정책은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입니다. 이것을 그저 이렇게 해보면 어떨것인가,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혹시 시행착오가 생겼을 때에는 고치면 되지 않겠느냐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기에 너무 위험부담이 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수급 및 가격정책은 에너지정책 목표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흔들림이 없다는 자신이 생겼을 때에 한가닥씩 떠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측면에서 다소 정도가 약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늦게 가는 것 그러나 분명하게 가는 것이 오히려 빠른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英國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마샬은 『경제는 스스로 비약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경구가 우리의 에너지정책방향을 앞으로 인도하는데 상당히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조심스럽게 모든 문제를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방향만은 분명히 개방하는 민간주도 형으로 나간다는 것을 결들여 말씀드립니다. ☐